

---

#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

전문위원 강동혁

---

## I. 개관

### 1. 본질

- 형법상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는 사람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자유라는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 그 중 업무방해죄와 경매·입찰방해죄의 경우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강조됨
- 한편, 신용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다만 그 대상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가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됨

## 2. 보호법익

### 가. 신용훼손

- ‘사람의 신용’
- ‘신용’이란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함

### 나. 업무방해

- ‘사람의 업무’
- 본죄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제한됨. 다만,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업무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

## 다. 경매·입찰방해

-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
- 경매와 입찰이 공정한 자유경쟁 하에서 행해지는 데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데 본질이 있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하는 경매·입찰뿐만 아니라 사인이 행하는 경매·입찰도 포함

##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 가. 형법 규정(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신용훼손	§313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5년↓, 1,500만원↓
업무방해	§314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컴퓨터 업무방해	§314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경매, 입찰방해	§315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2년↓, 700만원↓

## 나. 특별법 규정

적용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8, 41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5년↓, 5,000만원↓
	§89 1호, 37②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조합원의 쟁의행위	3년↓, 3,000만원↓
	§89 1호, 38①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한 쟁의행위	
	§89 1호, 42①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의한 쟁의행위 /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89 1호, 42조의2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동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90, 44②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2년↓, 2,000만원↓
	§90, 77	본법 76③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었음에도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음 / 긴급조정의 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쟁의행위 재개	
	§91, 41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1년↓, 1,000만원↓
	§91, 42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동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91, 45②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쟁의행위	
	§91, 63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하는 쟁의행위	
건설산업기본법	§95 1~3호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 /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 /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	5년↓, 5,0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①9호, 19①8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 록 하는 것	3년↓, 2억원↓
--------------------------	------------------	---	-----------

## 다. 기타

-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음

## 2. 양형기준 설정범위

### 가.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 포함

- 기본 구성요건이며,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는 점에 이론의 여지없음

### 나. 신용훼손죄 - 제외

#### ■ 적극설

- 형법은 명예훼손과 별도로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훼손을 신용훼손죄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신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신용훼손죄는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기본 범죄 중 하나이고, 양형기준 범죄군 명칭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음

#### ■ 소극설

- 유사 범죄인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 ⇨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곤란

#### ■ 검토

- 신용훼손죄를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업무방해, 경매·입찰방

---

해 범죄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많아 이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범죄 발생빈도가 낮아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이 곤란한 범죄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

- 국민 관심도 높지 않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낮음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측면이 많음 ⇨ 향후 명예훼손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 범죄군에서 설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체계적일 수 있음
- 다만 신용훼손죄를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범죄군 명칭 변경이 필요함

■ 범죄군 명칭 변경 : “신용·업무·경매범죄” ⇨ “업무방해범죄”

- 신용훼손죄를 제외할 경우 기본범죄로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범죄가 남게 됨
- 범죄군 명칭을 정할 때는 여러 구성요건을 포괄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범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적절
- 경매·입찰방해범죄는 업무방해범죄의 특별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범죄군 명칭을 ‘업무방해범죄’로 변경

다. 컴퓨터 업무방해죄 - 포함

-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발생빈도가 높지 않으며, 사람의 위력 또는 위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업무방해죄와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정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설정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본질에서 일반 업무방해죄와 동일하며, 이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5. 12. 29. 형법 개정 시 신설된 처벌조항임

-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의 경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일반 업무방해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유형구분을 통해 컴퓨터 업무방해죄만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 1)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의 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함)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 쟁의행위는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행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함
- 종래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sup>1)</sup>
- 그러나 그 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 판례를 변경하고,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

---

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다수

---

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시<sup>2)</sup>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지고 그것이 동시에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와 노동관계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sup>3)</sup>

## 2) 양형기준 설정범위 포함 여부 - 제외

-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 법정형이 낮은 노동관계법 위반죄(3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징역)에 관하여 특유한 양형기준을 상정할 필요성 낮음
- 노동관계법위반죄가 업무방해죄와 함께 기소될 경우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됨
- 실무상 노동관계법 위반죄의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고, 대부분 약식 기소되거나 구공판되더라도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

## 마.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1)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sup>4)</sup>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

---

2)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10.4.8. 선고 2007도6754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

- 
-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sup>5)</sup>

## 2) 양형기준 설정범위 포함 여부 - 포함

- 건설공사의 입찰 공정을 해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건설공사 입찰 방해는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여 공사과정 또는 완공 이후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임
- 실무상 발생빈도가 적지 않으며, 징역형 선고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임

## 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 1) 내 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sup>6)</sup>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담합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2) 양형기준 설정범위 포함 여부 - 제외

### ■ 적극설

- 공정거래법은 2007. 8. 3. 개정시 입찰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찰담합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별도로 규정한 바 있

---

5)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참조

6)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경락자),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

고, 법정형도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보다 높으므로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소극설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형법상 경매·입찰 방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차이가 있음
-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로 처벌됨
-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사업자인 법인만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

■ 검토

- 참고할 만한 실무례가 없어 양형기준 설정 곤란
- 향후 실무례가 축적되고 공정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에 관한 논의가 성숙된다면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의 기준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적합

### Ⅲ. 범죄유형 분류

#### 1.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 2. 유사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 가.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 ▣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 공용물무효·파괴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3. 양형자료조사 결과<sup>7)</sup>

### 가. 선고내역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형		전체
		실형	집행유예	
경매방해	수	23	131	154

7) 2009. 1. 1. ~ 2013. 12. 31. 선고된 징역형 사건 445건 분석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형		전체
		실형	집행유예	
	비율	14.9	85.1	100.0
업무방해	수	67	180	247
	비율	27.1	72.9	100.0
입찰방해	수	3	40	43
	비율	7.0	93.0	100.0
전체	수	93	352	445
	비율	20.9	79.1	100.0

## 나. 징역형의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경매방해	수	0	0	17	3	63	31	26	12	1	1	154	7.50
	비율	0.0	0.0	11.0	1.9	40.9	20.1	16.9	7.8	0.6	0.6	100.0	
업무방해	수	1	4	61	5	100	39	23	12	1	1	247	6.52
	비율	0.4	1.6	24.7	2.0	40.5	15.8	9.3	4.9	0.4	0.4	100.0	
입찰방해	수	0	0	1	0	17	7	6	11	1	0	43	8.65
	비율	0.0	0.0	2.3	0.0	39.5	16.3	14.0	25.6	2.3	0.0	100.0	
전체	수	1	4	79	8	180	78	55	35	3	2	445	7.07
	비율	0.2	0.9	17.8	1.8	40.4	17.5	12.4	7.9	0.7	0.4	100.0	

## 4. 대유형 분류

### 가. 업무방해와 경매·입찰방해의 분리

- ▣ 업무방해와 경매·입찰방해는 법정형의 차이가 큼
- ▣ 경매·입찰방해죄는 업무방해죄의 특별죄로서의 성격
- ▣ 업무방해와 경매·입찰방해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5. 업무방해죄의 중·소유형 분류

### 가. 구체적 양형분류안

#### 1) 제1안 : 구성요건에 따른 분류 (위계 / 위력 / 컴퓨터)

##### ■ 의의

- 법문의 구성요건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sup>8)</sup>, 기타 위계<sup>9)</sup>에 의한 업무방해’, ‘위력<sup>10)</sup>에 의한 업무방해’, ‘컴퓨터 업무방해’로 유형분류

##### ■ 분류안에 따른 분석대상 판결 분류<sup>11)</sup>

		형량(월)							실행 유예	집행 유예	합계	평균형량 (월)
		3	4	6	8	10	12	18				
위계	수			10	7	8	7	1	2	31	33	9
	비율(%)			30.3	21.2	24.2	21.2	3	6	93.9	(전체 중 22.6%)	
위력	수	3	38	40	17	10	5		36	77	113	6.2
	비율(%)	2.6	33.6	35.3	15	8.8	4.4		31.8	68.1	(전체 중 77.4%)	
전체	수	3	38	50	24	18	12	1	38	108	146	
	비율(%)	2	26	34.2	16.4	12.3	8.2	0.6	26.1	73.9	100	

##### ■ 적극설

- 위계와 위력, 컴퓨터 업무방해는 행위태양이 명백히 차이가 나는바, 구성요건에 따라 유형을 나누게 되면 그 기준이 명확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됨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행위 태양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분하여 소유형 분류 ⇨ 유사범죄 간 통일적인 기준 마련 가능

8)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

9)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허위사실의 유포는 위계의 예시로 보고 있음

10) 사람의 의사·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

11) 양형자료조사 대상 사건 중 일부인 146건 분석

- 
- 실제 판결 분석결과 위계형과 위력형 사이에 유의미한 양형 편차가 발견됨
    - 평균형량은 위계형이 9월, 위력형이 6.2월임
    - 위계형의 경우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형량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6월부터 1년까지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반해 위력형의 경우 징역 3월부터 1년까지 형량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4월과 6월에 대부분의 사건이 집중되어 있음
    - 위계형의 경우 지능적,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고 즉흥적인 범행이 많은 위력형에 비해 선고형량이 높은 것으로 보임

#### ■ 소극설

- 범정형이 동일한 범죄들에 대해 행위 태양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경우 소유형간 형량범위에 차별화를 기하기 어렵고, 그 경우 유형을 구분하는 의미가 퇴색됨
- 위계, 위력, 컴퓨터 업무방해 상호간 어떤 유형의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지 일반화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특히 컴퓨터업무방해죄의 경우 참고할 만한 실무례가 거의 없어 위계형, 위력형과 구분되는 형량범위를 설정하기 곤란

## 2) 제2안 : 일반적 / 집단적 · 조직적

#### ■ 의의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집단적 · 조직적 방해’로, 그 외의 경우를 ‘일반적 방해’로 분류

#### ■ 적극설

- 집단적 · 조직적인 업무방해의 경우 일반적 방해에 비하여 대체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유형분류에 반영하는 것

---

이 타당

- 2안에 의할 경우 실무례가 많지 않은 컴퓨터업무방해죄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됨
- 사기범죄의 경우 ‘일반사기’ / ‘조직적 사기’로 대유형을 분류하였고, 공문서 범죄 중 위조·변조 유형에서 ‘비영업적·비조직적’ / ‘영업적 또는 조직적’으로 소유형을 분류한 바 있음

■ 소극설

- 실제 사례에서는 일반적 방해인지 집단적·조직적인 방해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업무방해 범죄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들 사이에서 분쟁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다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사기범죄 등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반드시 가해/피해, 선/악의 기준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또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음 ⇨ 집단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방해라고 하여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음
- 절도, 약취·유인, 식품·보건, 마약, 지식재산권, 선거, 조세,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등 대다수의 양형기준에서 조직적 범행을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3) 제3안 : 소유형분류를 하지 않는 방안

■ 적극설

- 1안, 2안 모두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기에 곤란한 단점이 있음
- 업무방해 대유형에 대하여 무리하게 소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유형으로 두되, 다양한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적정한 형량이 권고되도록 함

---

■ 소극설

- 업무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낮지 않으며, 다양한 생활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있음
- 양형기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권고하는 기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소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

#### 4) 검토 - 3안 채택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들에 대해 행위 태양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경우 소유형간 형량범위에 차별화를 기하기 어렵고, 그 경우 유형을 구분하는 의미가 퇴색됨
- 위계/위력의 경우 동일한 조문 내에서 구성요건만 달리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 유형을 달리 정한 전례가 없음
- 소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하더라도 위계/위력/컴퓨터에 특유한 양형인자를 설정하는 데 문제없음

## 6. 경매·입찰방해의 중·소유형 분류

### 가. 법정형

- 형법상 경매·입찰방해 : 2년 이하 징역
-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 5년 이하 징역

### 나. 구체적 양형분류안

- 위계형/위력형, 일반적/집단적·조직적, 경매방해/입찰방해
  - 위계형/위력형, 일반적/집단적·조직적, 경매방해/입찰방해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의 법정형이 낮아 형법 위반 범죄 내의 유형분류 실익이 없는 반면, 형법상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

---

법상 입찰방해의 법정형 차이가 커 두 법률을 포괄하는 하나의 유형분류 기준을 내세우기 곤란

- 결국 형법상 일반 경매·입찰 방해를 하나의 유형으로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

■ 제1안 : 일반 경매·입찰 방해 /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의 법정형 차이를 유형분류에서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입찰방해를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특별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

■ 제2안 :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건설산업기본법은 경매·입찰방해 중 입찰방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므로 이를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와 등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체계상 부적절할 수 있음
- 가중처벌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는 양형인자로도 반영할 수 있음

■ 검토 : 제1안 채택

-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를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에는 법정형의 차이가 너무 큼
- 최근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 건설사업과 관련한 담합 등의 입찰비리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벌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정형의 범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소유형 분류가 필요
- 경매<sup>12)</sup>와 입찰<sup>13)</sup>은 본질에 있어 유사하고 실제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를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와 동일

---

12) 경매 :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할 가격을 구두로써 다투어 높여 부르게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경락)를 하는 것

13) 입찰 : 경쟁계약에 있어 다수인으로 하여금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써 표시·제출하게 하여 입찰실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낙찰)하는 것

---



대유형 내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체계상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 7. 유형분류안

### 01. 업무방해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5년 ↓			

### 02. 경매·입찰방해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 · 입찰방해	2년 ↓			
2	건설 입찰방해	5년 ↓			

## IV. 형량범위 검토

###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 ▣ 형량분포 통계를 참조하여 가급적 다수의 사례가 형량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되, 죄질이 중한 유형 등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 법정형 및 행위 유형이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양형기준 참조

### 2. 업무방해 유형

#### 가. 공무집행방해 범죄 형량범위 설정 시 고려사항<sup>14)</sup>

14)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4차 공청회 자료집 I 149쪽 이하

##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8	24	30			
공무집행 방해	수	1	5	27	4	95	0	44	1	23	5	0	0	0	205	6.66	
	비율	0.5	2.4	13.2	2.0	46.3	0.0	21.5	0.5	11.2	2.4	0.0	0.0	0.0	100.0		
위계공무 집행방해	수	0	1	1	0	15	0	11	0	16	7	1	0	0	52	8.59	
	비율	0.0	1.9	1.9	0.0	28.8	0.0	21.2	0.0	30.8	13.5	1.9	0.0	0.0	100.0		

### 평균형량

- 공무집행방해 6.66월, 위계공무집행방해 8.59월

### 분포비율

- 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46.3%), 징역 8월(21.5%)의 분포비율 높고, 징역 1년 초과 사건은 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징역 10월(30.8%)의 분포비율이 가장 높고, 징역 6월(28.8%), 8월(21.2%), 1년(13.5%)의 비율 순으로 고르게 분포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당 정도 포섭할 수 있게 가중영역의 상한을 높게 설정

## 형량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나. 업무방해 형량분포<sup>15)</sup>

15) 2009. 1. 1. ~ 2013. 12. 31. 선고된 징역형 사건 247건 분석

단위: 명, %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업무방해	수	1	4	61	5	100	39	23	12	1	1	247	6.52
	비율	0.4	1.6	24.7	2.0	40.5	15.8	9.3	4.9	0.4	0.4	100.0	

■ 업무방해의 평균형량은 징역 6.52월

■ 징역 6월이 전체의 40.5%로 가장 많고, 징역 4월이 24.7%로 다수의 비율을 차지. 징역 1년 초과 사건도 존재(징역 1년6월 1건, 징역 2년 1건)

## 다. 검토

■ 제1안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양형기준을 참조하되(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동일),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위력/컴퓨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하나의 유형으로 정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영역의 폭을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형량범위를 전부 포섭하도록 설정<sup>16)</sup>

-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중상해를 포섭하기 위해 실무례에 비해 가중영역 상한을 매우 높게 설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의 가중영역 상한은 공무집행방해보다는 낮게 위계공무집행방해보다

16) 참고로 법정형이 동일한 위증 범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는 높게 그 중간 지점으로 정함

- 기본영역에 70.9%, 감경영역에 85%의 사건이 포섭

■ 제2안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 6월	4월 - 1년	10월 - 3년

- 업무방해 범죄의 경우 유형력 행사가 단순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건이 많다는 점에서 사건 분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역 4월 ~ 1년을 기본영역으로 삼음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를 고려하여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를 정함

■ 검토의견 : 제1안

-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위력 업무방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위계 업무방해(입시부정, 비자발급)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큰 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반영해 실제 형량분포보다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
- 업무방해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형 분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양형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 폭을 다소 넓게 설정할 필요
- 공무집행방해 범죄와 평균형량, 형량분포 등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 제2안에 의하면 분석대상 판결 중 97.2%가 기본영역에 포섭되는 문제도 있음

### 3. 경매 · 입찰방해 유형

## 가. 일반 경매·입찰방해

### 1) 법정형(2년 ↓) 동일한 범죄 양형기준

#### ■ 공문서 등 부정행사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 ■ 일반폭행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 ■ 영아유기, 학대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유기·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 ■ 배임증재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

### 2)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경매방해	수	0	0	17	3	63	31	26	12	1	1	154	7.50
	비율	0.0	0.0	11.0	1.9	40.9	20.1	16.9	7.8	0.6	0.6	100.0	
입찰방해	수	0	0	1	0	17	7	6	11	1	0	43	8.65
	비율	0.0	0.0	2.3	0.0	39.5	16.3	14.0	25.6	2.3	0.0	100.0	
전체	수	0	0	18	3	80	38	32	23	2	1	197	7.75
	비율	0	0	9.1	1.5	40.6	19.3	16.2	11.7	1	0.5	100.0	

### 3) 고려사항

- ▣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의 평균형량은 7.75월이고, 징역 6월이 선고형의 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역 6월 ~ 징역 1년의 합계가 선고형의 87.8%에 이름
- ▣ 경매·입찰방해죄는 업무방해죄의 특별죄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오히려 법정형은 가벼운데, 선고된 형의 평균형량은 경매·입찰방해죄(7.75월)가 업무방해죄(6.52월)보다 높음
- ▣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보아도, 경매·입찰방해의 평균형량은 실제 선고된 사례가 2건에 불과한 학대죄를 제외하면 가장 높고, 전반적인 선고 형량도 높은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형량범위보다 다소 높게 설정할 필요 있음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평균형량 5.7월, 최빈도 6월
  - 영아유기 : 평균형량 6.3월, 최빈도 6월(59%)
  - 학대 : 평균형량 11월
  - 폭행 : 평균형량 6.2월, 최빈도 6월(33.3%)

### 4)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입찰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 ■ 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사이에 선고형이 주로 분포(87.8%)하고 있고, 징역 6월 미만의 경우는 10.6%에 불과하며, 징역 1년 초과인 경우는 1.5%에 불과하므로 기본 영역의 하한을 6월, 상한을 1년으로 정함

#### ■ 감경영역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 고려
- 실무례의 70.5% 포섭

#### ■ 가중영역

- 가중영역의 하한을 10월로 하되,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보다 평균형량, 형량분포구간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을 법정형 상한인 2년으로 정함
  - 경매·입찰방해의 경우 다수인의 조직적인 공모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 있음에도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가중영역의 상한을 법정형의 상한까지 정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음

## 나. 건설 입찰방해

### 1) 양형자료 조사 결과<sup>17)</sup>

#### ■ 선고내역

17) 판결문검색시스템 통한 조사 결과 2011. 1. 1. ~ 2013. 12. 31. 선고된 징역형 사건 41건 분석

단위: 명, %

죄명		선고형		전체
		실형	집행유예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	6	35	41
	비율	14.6	85.4	100.0

#### ▣ 징역형의 형량분포

단위: 명, %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	0	0	0	0	1	10	1	8	16	5	41	14.63
	비율	0	0	0	0	2.4	24.4	2.4	19.6	39.0	12.2	100.0	

- ▣ 입찰방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평균형량은 14.63월이고, 징역 1년 6월이 선고형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역 1년 ~ 2년의 합계가 선고형의 70.8%에 이릅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은 법정형이 동일하고 행위태양이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와 비교할 때 평균형량(공무집행방해 6.66월, 위계공무집행방해 8.59월) 등 형량분포가 월등하게 높은 편이고,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에 비해 형량분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2) 검토

#### ▣ 제1안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건설 입찰방해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사이에 선고형의 대부분이 분포(97.6%)하고 있으므로 기본 영역을 징역 8월부터 징역 2년까지로 정함
- 감경영역은 하한의 경우 징역 6월 미만으로 선고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로 정하고, 상한의 경우 적정한 중첩영역을 고려하여 징역 1년으로 정함(실무례 48.8% 포섭)

- 가중영역은 유사범죄인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를 참조

■ 제2안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건설 입찰방해	6월 - 1년	10월 - 2년	1년 6월 - 4년

- 평균형량, 형량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의 하한을 제1안보다 높게 10월로 설정
  - 선고형의 70.8%가 기본영역에 포섭됨
- 감경영역은 제1안과 동일하게 정함
- 가중영역은 기존에 선고된 형량 중 가장 높은 형이 징역 2년이나, 대형 국책 건설사업과 관련한 입찰 비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건설공사의 입찰 공정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법정형 상한에 근접할 정도로 높게 설정

■ 검토의견 : 제2안

- 건설 입찰방해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보다 평균형량 등의 형량분포가 월등히 높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 있음
- 안전과 관련되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건설 입찰방해는 죄질이 무거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양형을 할 수 있도록 가중영역의 상한 자체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4. 검토결과에 따른 형량범위

■ 업무방해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5년 ↓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경매·입찰방해 유형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 · 입찰방해	2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건설 입찰방해	5년 ↓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 V. 업무방해 유형의 양형인자 검토

### 1.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 가. 특별감경요소(행위)에 대한 검토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다수의 범죄들이 특별감경인자로 삼고 있고, 업무방해 범죄 사례에서도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인자로 실시
- 정의규정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감금, 폭력, 공갈, 사기 등 범죄에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였고, 업무방해 범죄 실제 사례에서도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감경한 경우가 적지 않음

- 체포·감금범죄의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였고, 폭력 등 나머지 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등 범행동기와 관련된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범행동기 중 특별한 것을 따로 떼어내어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방식보다는 실제 사례에서 다양한 범행동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또는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점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업무방해의 실제 사안에서 행위태양·결과 중 어느 것이 경미하더라도 양형인자로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음
- 업무방해에서는 행위태양·결과 중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태양과 결과로 중복 감경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둬야 타당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정의규정
  -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고의의 측면에서 감경요소로 규정
- 폭력, 체포·감금, 사기 등의 양형기준에서 미필적 고의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 위력형 업무방해는 폭력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위계형 업무방해는 기망적 요소가 있어 사기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폭력범죄 및 사기범죄와 같이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삼는 것이 타당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행위불법이 상당 정도 약해지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이 바람직

### 나. 특별감경요소(행위자/기타)에 대한 검토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특별감정인자(행위자/기타 인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내부고발은 폭력, 체포·감금, 유기·학대, 약취·유인 범죄 등에서 특별감정인자(행위자/기타 인자)로 규정되어 있음
- 다수인이 공모하여 업무방해 범행(특히 위계형)을 조직적으로 범하는 경우에 있어 범죄에 가담한 사람 중 일부의 ‘내부고발’을 자수에 준하여 취급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외
  - 업무방해죄는 재산범죄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나, 위험범으로서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실제 사례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곤란한 이상, 구체적 사안에서 ‘상당 부분 회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함이 타당함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포함
  - 반면, 구체적 사안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는 양형인자로 반영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당 부분 회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판단이 쉬울 것으로 보이므로 포함함이 타당함
- 정의규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다. 일반감경요소(행위)에 대한 검토

### ■ 소극가담

- 공무집행방해에서도 일반감경인자(행위요소)로 두고 있음
- 정의규정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일반감경요소(행위자)에 대한 검토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른 범죄의 예에 따라 일반감경인자로 규정

## 마. 특별가중요소(행위)에 대한 검토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범행의 주도자와 그렇지 않은 공범의 가벌성 차이를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의 균형상, 범행주도자를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게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폭력범죄, 체포·감금 범죄 등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업무방해 범죄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들 사이에서 분쟁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다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사기범죄 등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반드시 가해/피해, 선/악의 기준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범하였다 하여 반드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범행을 일률적으로 가중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용역 동원 등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한정하는 한편, 비난가능성이 높은 다른 수법의 범행을 함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양형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
  - 공갈, 횡령·배임,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정의규정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폭력, 체포·감금, 사기, 공갈 등 범죄에서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특별가중인자 포함
-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sup>18)</sup>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나, 위 인자는 사실상 전과관계를 양형요소로 반영한 것으로 ‘행위인자’가 아닌 ‘행위자/기타 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전과 관련 양형인자들과의 관계 정립도 쉽지 않음. 또 위 인자는 소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서의 삼진아웃제를 엄두에 두고 예외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업무방해 범죄에서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인자를 차용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하면서 동시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요소를 두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
- 그러나 행위태양인 ‘위력 또는 위계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특별가중요소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중복될 여지가 있음
- 물론 ‘위력 또는 위계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 위 특별가중요소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이 위력 또는 위계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대부분 업무가 방해된 정도 또한 중할 것이고,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력 또는 위계의 정도가

---

18)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가중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따라서 행위태양 측면에서의 ‘위력·위계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제외함이 타당함

- 정의규정

-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sup>19)</sup>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sup>20)</sup>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형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해 모든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주로 폭력성향을 띠는 범죄에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요소로 삼는 동시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요소로 삼고 있음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폭력성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폭력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삼는 것이 타당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정당하지 않은<sup>21)</sup>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sup>22)</sup>

---

19) 업무수행 자체의 지장·마비로 포섭하기 쉽지 않은 피해(판결 사례상 공공이익, 공공의 안녕질서, 학생들의 입학기회, 면학분위기 등, 재산상 손해)를 반영

20)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에서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정하고(단,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대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음),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21) 이와 달리 정당한 경제적 대가 내지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처리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인자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 살인, 성범죄, 폭력, 공갈, 체포·감금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의 경우 처리에 관한 부가규정을 두고 있음
- 위력형 업무방해범죄의 경우도 폭력범죄가 수반되거나 폭력성이 발현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과 동일한 처리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VI. 경매·입찰방해 유형의 양형인자 검토

### 1. 양형인자표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됨

- 22) 판결 분석 결과, 국내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공사를 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허위시공실적을 신고하여 위계로써 해외건설협회의 실적 신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취득한 점’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실시한 판결, 토익 답안을 전송받아 시험장의 부정시험의뢰인들에게 전송하여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 토익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범죄수익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실시한 판결, 학교의 행정실장과 교감이 영어교사 채용 특정응시자 채점결과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답안지를 고쳐 점수를 높여 임용되게 하여 위계로써 교사채용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이익 취득 없음’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실시한 판결이 있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 가. 특별감경요소(행위)에 대한 검토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업무방해 유형과 정의규정 동일

####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담합행위의 주된 목적이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입찰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경우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볼 수 있음

- 대법원은 종전에는 담합의 목적이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입찰예정 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는 경우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부정(대법원 1971. 4. 20. 70도2241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근래에는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여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긍정(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판례 태도에 비추어 담합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모한 출혈 경쟁 방지에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포섭함이 타당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정요소로 두고,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무모한 출혈경쟁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경우
  - 긴밀한 사업관계에 있는 주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부득이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행위태양의 정도(위계, 위력이 경미한 경우)를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고 결과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만을 특별감정요소로 반영
- 경매방해의 사례는 대부분 허위유치권, 허위임차권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입찰방해의 사례는 대부분 담합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

---

므로 그 행위태양이 전형적이어서 실제 사례에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움

- 경매·입찰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즉시 성립하고, 실제 그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실제 현실화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위험의 현실화 여부는 양형인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판결 분석 결과 사례로는 허위 유치권, 임차권 신고 후 철회한 경우, 경매취하로 종료된 경우, 실제 감정이 또는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경우, 입찰방해에도 불구하고 제3의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등이 있음
- 경매·입찰방해범행은 직접적으로는 경매·입찰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함으로써 경매·입찰의 대상과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피해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적인 면의 정도를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특별감정요소로 하되,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범행으로 인한 경매지연, 저가낙찰, 특정업체의 선정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경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자, 채권자, 경락인, 입찰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매·입찰방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 과정에서 일부 보유한 공사대금채권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이 담합행위

---

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며 가담하는 경우 등 미필적 고의가 문제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

## 나. 특별감경요소(행위자)에 대한 검토

###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내부고발은 동종업자들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방해범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특별감경인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 처벌불원 ⇨ 제외

- 경매·입찰방해죄는 재산죄적 성격과 자유·안전에 관한 죄로서의 성격을 병유한다는 관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경매·입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경매와 입찰의 공정으로서 재산, 신체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전제로 하는 다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와는 성격을 다소 달리하는 점, 경매·입찰방해죄는 그 범행의 유형에 따라 경매 목적물 소유자, 채권자, 경락인, 경매참가자, 입찰시행자, 입찰참가자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외함이 타당함

## 다. 일반감경요소(행위)에 대한 검토

### ■ 소극가담

- 업무방해 유형과 동일하게 정의규정 설정

---

## 라. 특별가중요소(행위)에 대한 검토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경매·입찰방해죄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부 공범의 제의에 따라 다수의 공범이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형태의 범행이 다수 있고, 그러한 가담정도 차이에 따른 실제 양형편차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포함함이 타당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경매·입찰방해 범죄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수법의 범죄를 가중 처벌할 필요 있음
- 정의규정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입찰방해죄 사례 중에는 같은 지역 동종업자들 사이의 담합이 상당기간 동안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관련 입찰을 방해한 사례<sup>23)</sup>들이 있고, 경매방해죄 사례 중에는 조직을 결성하여 계속적으로 경매 현장을 찾아다니며 위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음. 이러한 사례들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가벌성이 높으므로,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할 필요 있음
- 경매·입찰방해죄에서의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이 경매와 입찰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라는 표현은 삭제

####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경매방해의 경우 위험이 현실화 되어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거나, 경매가 상당기간 지연되어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인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는 사례가 있음
- 입찰방해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비리로 인하여 부품 불량품의 하자가 현실화 되면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는 사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대형 국책사업과 같이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도 커 입찰 과정 등에 있어 특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례 등이 있음
- 위와 같이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는 결과불법의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가중요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를 참조하여 경매·입찰방해죄에 대하여도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하되, 다음과 같이 정의함

23) 인천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운영자들이 약 10개월 동안 61회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입찰을 방해한 사례, 조명장비 공급업자가 약 3년 동안 186회의 입찰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는 등으로 입찰을 방해한 사례 등

- 경매방해로 인한 저가낙찰, 경매지연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제외

- 경매·입찰방해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는 이욕범으로서 재산죄적 성질이 강하고, 위력형 경매·입찰방해의 발생빈도도 미미하므로 주로 폭력성향을 띠는 범죄에서 특별가중요소로 삼고 있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할 필요성 낮음
-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는 외에 특별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사례도 찾기 어려움

## VII. 집행유예 기준

### 1. 업무방해 유형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ul>

구 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계획적인 범행</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우발적인 범행</li> <li>○ 진지한 반성</li> <li>○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li> <li>○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피고인이 고령</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업무방해 유형의 양형인자 및 공무집행방해,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공갈, 사기범죄 등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함

## 2. 경매·입찰방해 유형의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진지한 반성</li> <li>○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ul>

구 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이 고령</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경매입찰방해 유형의 양형인자와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범죄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함